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1031-200000225026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미얀마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자원교류

2019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CHIT SU NAING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미얀마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자원교류

지도교수 이 성 봉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CHIT SU NAING

CHIT SU NAING의 정치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23일

위원장 정치학박사 이 대 희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성 봉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차 재 권 (인)

목 차

Abstract ····· iii

Ⅰ. 서론 ····· 1

Ⅱ. 미얀마의 외교 정책 ····· 5

1. 민간 정부 시기 외교 정책과 변화 ····· 5
2. 군부 정권 시기 외교 정책과 변화 ····· 7
3. 신군부 정권 시기 외교 정책과 변화 ····· 12
4. 소결 ····· 19

Ⅲ. 중국의 외교 정책 ····· 21

1. 중국의 외교 정책 변화 과정 ····· 21
2. 중국의 에너지 외교 ····· 25
3.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정책 ····· 27
4. 소결 ····· 30

Ⅳ. 미얀마와 중국 간 자원 교류의 현황과 미래 ····· 32

1.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 ····· 32
2. 미얀마와 중국의 자원 교류 현황 ····· 34
3. 전망 ····· 38

Ⅴ. 결론 ····· 44

참고 문헌 ····· 47

표 목 차

<표 1> 미얀마의 대중국 교역 비중 ····· 34
<표 2> 미얀마의 교역량 ····· 35
<표 3> 미얀마의 수출에서 석유가스(Petroleum)의 비중 ····· 36
<표 4> 미얀마의 산업별 GDP 비율 ····· 37
<표 5> 중국과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 ····· 38
<표 6>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 ····· 39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A Study On Strategic Interest and Resource Exchange between

Myanmar and China

CHIT SU NAI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The Graduate School

Pukyoung National Univerc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Seongbong, PhD

Abstract

Since its independence, Myanmar has engaged in active diplomatic activities, including active participation in non-aligned routes.But the departure of non-aligned routes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and economic sanctions from Western countries have shown signs of closure.

However, the relationship with China has continued to take place, and with their help, they have been evaluated to have achieved results such as joining ASEAN.

However, there was a strong view that China's support for the military regime and support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West would lead to de-Chineseization and relations with Western countries on Myanmar's foreign routes after the end of the military regime.

But to this day since the handover of civil affairs, Myanmar and China have maintained close ties. This may be due to pressure from Western countries and China's support in the wake of the Rohingya

crisis, but the fundamental reason is the establishment of interests between Myanmar and China.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fter reform and opening required a stable supply and diversification of supplies of energy resources. This materialized through China's new energy policy announced in 1997. Meanwhile, Myanmar, which borders China, had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geopolitical advantages of being located in the Indian Ocean. The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against this backdrop have led to Myanmar's provision of PNG supplies and pipeline routes to China, leading to China's the economic corridors in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changes in foreign policy in Myanmar and China, and to examine how resource exchanges centered on natural gas affect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day.

Key word : China, Myanmar, Energy diplomacy, Economic diplomacy, Resource diplomacy

Ⅰ. 서론

802년 푸(Pyu) 대표단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방문한 것을 통해 이루어진 최초의 외교 접촉 이후 미얀마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 특히 미얀마와 윈난 간의 무역 교류는 수 세기 동안 지속되었으며 1940년대 후반 미얀마의 독립과 중국 정권의 수립 직후 외교 관계 성립으로 이어진다. 냉전 시기 양 국가의 관계는 국제 외교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얀마는 비동맹 체제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중국의 대외 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는 평화공존 5개 항 원칙에 대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얀마의 대외 정책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다. 미얀마의 대외 정책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미얀마의 대외 정책 수립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John stone(1963)은 미얀마 독립 이후 민간정권에서 이루어진 중립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외교 정책이 실패의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또, Haacke(2006)는 1988년~2011년 신군부 정권기 외교 정책의 변화 요인으로 국내적 요인을 주목하였다. 연구는 내부 통합과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극복 등을 위해서 고립주의의 병행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즉 국제 및 지역 환경에 따라 미얀마의 외교 정책이 변화한 것이다. 한편 Mya Than(2005)는 연구를 통해서 경제적 관점에서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얀마의 정치적·경제적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얀마의 대외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얀마 내부의 관점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강대국들의 외교 정책의 대상으로서 미얀마를 다룬 연구도 또 다른 미얀마 대외 정책 연구의 한 축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크게 중국과 미국의 행위 대상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먼저 중국과 연계한 연구로는 미얀마의 독립 이후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Maung Aung Myoe 2011)가 대표적이다. 또 Steinberg와 Fan의 연구(2012)는 미얀마와 중국 사이에 협력 분야와 이에 대한 요인, 또 이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과 딜레마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Lixin의 연구(2006)는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로운 안보 환경 구축을 위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옹호 혹은 변호를 지속하면서도 군부정권 퇴진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Li와 Zheng는 연구(2009)를 통해 중국이 미얀마의 군부정권에 대해서 방조한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중국의 입장에서 다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중국의 내정 불간섭 정책이 국방 및 경제발전을 위해 미얀마를 비롯한 권위주의 성향의 국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을 당사자 그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으며, 미얀마를 중국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 중국의 관점에서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에 중점을 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Poon(2002)는 연구에서 중국의 해상 패권 장악과 남진 정책의 가속화 등 영향력 확대를 위해 미얀마와의 관계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미얀마의 군정 후반기 에도 진행되었는데, ICG의 연구(2010)는 2010년 총선 당시 미얀마와 중국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반면 Li는 연구(2010)를 통해 혼란이 종식되지 않은 미얀마에 대해서 근대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의 대외 정책 대상으로 미얀마를 다룬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

러한 연구는 주로 미얀마 군정에 대한 경제제재의 대상 혹은 민주화의 대상으로서 방법론 등이 논의되었다. 대표적으로 Holliday(2005)와 Seekin(2005)는 연구를 통해 미국의 미얀마 제재의 당위성과 그 내용 그리고 군부정권의 퇴진을 위한 미국의 역할 등에 대해 다루었다.

반면 미국의 대 미얀마 압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었는데, Steinberg는 연구(1999;2007;2010)를 통해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압박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역량과 국익의 손실, 미얀마 국민들의 피해 등 대외 정책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에 대해 적극 제기했다.

끝으로 중국의 관점에서 미얀마의 가치를 재발견한 연구와 유사하게 미국의 관점에서 미얀마의 가치를 발견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Egreteau(2008)는 연구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의 동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외교정책으로서 미얀마를 주목하여 이들과의 관계 발전 주장하였다.

상술한 선행 연구는 일련의 한계를 가진다. 먼저 대부분의 연구가 미얀마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주요 행위자의 정책 대상으로서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변화의 과정을 깊게 탐색하였다. 이는 특히 중국과 연계한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단순하게 중국의 세력 확장과 미얀마의 정권 유지 등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한계를 가진다. 먼저 미얀마의 민정 이양이다. 과거 미얀마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던 군부 시기에는 미얀마의 정권 유지가 중국의 동남아시아 세력 확장의 도구로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정 이양 이후에는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낸 서구 국가와 미얀마의 관계 개선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는 최소한 이전과 다름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군정 시기 진행된 협력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미얀마 군정에 대한 중국의 필요성만으로는 양국가의 관계 해석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양국의 대외 관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된다. 먼저 중국은 80년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미얀마의 에너지 자원, 그 가운데에서도 천연가스가 현재의 미얀마와 중국과의 관계에 주효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연구 질문이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원 교류를 중심으로 미얀마와 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군정 종료 이후 서방 국가와의 관계 증진에 나설 것이란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얀마와 중국 간의 외교 관계에 대해 본질적인 접근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과 미얀마의 경제 발전 시도 등이 이들 국가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2장에서 미얀마의 독립 이후 비동맹중립노선과 평화공존 5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외교 관계 변화를 정권별로 살펴 미얀마의 대외 정책 기조를 살피고자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중국의 대외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파생된 대(對) 동남아시아 정책과 에너지 외교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상술한 미얀마와 중국의 외교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현재 양 국가간의 교류를 진단하고 전망하고, 5장을 통해 연구의 함의를 논의하며 끝맺고자 한다.

Ⅱ. 미얀마의 외교 정책

1. 민간 정부 시기(1948년 - 1962년) 외교 정책과 변화

미얀마는 1948년 1월 4일 독립국가가 된다. 미얀마의 권력집단의 이념에 따라 외교정책은 사회주의권에 편향되었으나, 서구국가의 원조 필요성 증대, 경제재건, 반정부세력의 암약 등으로 인해 국내 정치 불안요소의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 누 총리는 미국과 영국, 소련 등의 강대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외교적 입장을 선언한다(U Nu 1951). 이는 주요 강대국들이 타국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강대국의 결정이 항상 옳지 않으며, 강대국과의 연대는 긴장을 초래함에 따라, 미얀마가 강대국과 연대하지 않음을 통해 타국 간 긴장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Liang 1990).

민간정부의 외교정책을 결정했던 국내적 요인은 첫째, 미얀마의 독립운동 경험이다. 미얀마의 독립운동은 자국의 역량부족을 인정하고 아웅산 주도 아래 일본과 연대하였다. 미얀마를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한 일본은 '버마 독립군'을 창설하여 영국에 투쟁했다. 반면 소수민족들이 영국편에 서서 독립 이후 국론 분열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불교 종교성에 따라 인간과 그 환경은 영구적이지 않고, 주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논리를 외교정책에 대입한다. 정부는 타국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상황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탄력적인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

1949년 중국의 공산화 이후 미국은 미얀마에게 막대한 양의 원조르 시행한다. 이는 공산주주의 위협을 무마시키고,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미얀마의 비동맹주의에 대해 미국은 대립적이고 회의적으로

보았다. 민간정부 당시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는 이념적 대립 아래 미국의 경제지원과 이념 확산 시도라는 이중 전략시기로 정의된다. 그러나 미얀마는 미국의 원조 취지와 달리, 국민당 잔당 지원, 국무부 기술협력국의 지원 방식이 외교정책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와 같은 정치. 외교적 문제에 따라 원조 수혜를 중단시켰다(Liang 1990). 우 누 총리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간접적 지원 즉, 인력과 기계류 지원 등 간접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미국 경제 고문단이 미얀마의 정책 고문을 맡으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은 재개되었다.

한편 인도와는 1947년 12월 수교를 통해 양국의 관계는 원만하게 출발한다. 미얀마 독립 직후 소수종족의 분리주의운동에 대한 저지를 위해 인도 네루 총리에게 무기와 지원금 모금을 요청했다. 인도의 지원 아래 1949년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국민당 잔당세력의 위험성에 대해 유엔총회에서 이를 해결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그리고 중국 인민군의 불법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얀마의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도 수행한다. 우 누 총리와 네루 총리는 비동맹운동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1955년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국 중심의 비동맹회의를 성사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미얀마 우 누 총리는 1954년 1차 콜롬보회담에서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비난한 반면, 네루 초리는 제국주의에 대한 우려에 동감했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비난은 주저했다. 1960년 인도가 중국과 국경협정을 합의했을 때 우 누 총리는 미얀마의 치안, 안보가 담보되지 못한 협정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동구권 국가와의 관계는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외교정책의 전환, 미얀마 국민당 잔당세력의 위축, 평화공존 5대 원칙 체결 등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1955년 10월 미얀마

와 소련 양국은 평화공존 5대 원칙의 존중, 국제적 긴장 완화의 적극적 환영, 국민당 잔당세력 제거에 대한 관심,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 확충 금지 등에 대한 합의를 가져왔다(Liang 1990).

이외에 미얀마는 1955년에 폴란드, 1956년에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 1961년에 동독 등 동구권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비동맹운동을 주장했던 티토 대통령과 우 누 총리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동구권 국가 중 유고슬라비아는 미얀마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고슬라비아와 미얀마는 수동적 비동맹노선이 아닌 평화에 기반을 둔 중립주의를 공통적으로 지향한다.

2. 군부 정권 시기(1962년 - 1988년) 외교 정책과 변화

우 누 총리를 이어 1958년 과도군사정부를 구성한 네윈은 미얀마의 강력한 중립주의 지속을 선언했다(Johnstone et. al 1959). 1962년 발생한 쿠테타 이후 혁명평의회는 미얀마의 외교노선에 대해 비동맹중립주의와 우호 및 협력, 평화와 군비감축 등으로 확정한다(BSPP 1973b). 이와 같은 6대 원칙은 '베오그라드'와 '카이로' 비동맹회의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1974년 사회주의 헌법 제 26조에 따르면 "국가는 영속적으로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시행하고, 세계평화와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 간 평화로운 공존 원칙을 확인한다."고 명시한다.[1)]

1962년~1988년 네윈의 집권기간 동안 세계는 양극 체제로 고착화 되었고,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 등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1969

1) 1974년 버마 변호사협회 원문

넌 닉슨독트린 등은 국제 사회의 긴장을 완화시키기도 했다.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지지하며 평화공존 5대 원칙 고수, 아시아아프리카 회담에서 합의된 비동맹노선을 준수하는 외교관계를 설정하면서 네윈 정권기에 수립된 외교정책은 독립적 중립, 활동적 중립, 긍정적 중립, 엄정한 중립, 비동맹 정책으로 정리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Liang, 1990).

그러나 1979년 미얀마는 비동맹운동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Liang(1990)은 비동맹의 순수성 퇴색과 미얀마 외교정책에 대한 타협화, 소련의 영향력 확대 우려 그리고 카스트로의 중국과 연대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라 정리하였다.

한편 네윈은 우 누 정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완성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네윈을 비롯한 군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불만은 없었으나 높은 수준의 경제적 민족주의의 달성을 주장하였다. 반제국주의, 사회주의적 독자 생존 노선은 국제회의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혁명평의회는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와의 연대나 사회주의의 국제화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에게 적대감을 증폭시켰음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국가에서 버마식 사회주의는 친공산주의로 인식된다. 또한 사회주의권에서도 미얀마는 유사사화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는 평가를 받게된다(Maung Aung Myoe 2011; Hla Min 1998; Kanbawza Win 1986).

미국과의 관계의 경우 우 누 정권 말기 미국과 경제, 교육에 대한 원조를 통해 활발한 교류관계를 구축했으나, 1962년 네윈 정권의 급진적 국유화 추진으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재건에 힘쓰면서 풀브라이트, 포드재단 등의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중단되었다. 또한 관광객과 학자,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되었으며, 미국 외교관의 경우 여행을 엄격하게 제한되었다(Liang 1990). 이에 미국은 미얀마를 폐쇄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는 전

체주의 국가로 규정한다. 미국은 네윈 정부의 급진적 사회주의 이념 설정 이후, 미얀마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지 않는 등의 방임적 자세를 유지했으나, 미얀마는 사회주의 노선을 완성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받아들였다.

중국 문화혁명으로 인해 미얀마가 홍위병으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미얀마는 미국의 군수물자와 군 장비 지원을 통해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1971년 중국과의 관계가 재정상화된 후 미얀마는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중단했으나 13년간 미국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았다. 1974년 미얀마는 버마사회주의계획당으로 정권을 이양하고 미얀마 경제는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해외원조를 수용하게 된다. 해외원조에 대해 미얀마는 사회주의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다. 따라서 1980년부터 2년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원조가 재개되었다(Liang 1990). 또한 양국 간 군사 교류가 재개되어 주로 미얀마 마약 생산과 퇴치에 대한 제어를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한편 우 누 총리와 인도의 네루 총리의 개인 친분과 유사한 정치 이념과 세계관 등으로 미얀마와 인도는 우호관계를 유지했으나, 네윈 정권 하에서 인도와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우 누 총리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문제, 미국과 중국 관계 중재를 위해 직접적, 적극적 자세를 보인 반면, 네윈은 중립적 자세를 취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피했다(Liang 1990). 네윈의 비동맹중립주의에 기초한 독립적, 활동적 외교정책은 경제민족주의에 의해 폐쇄적 외교정책으로 변질됨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소유재산과 외국 자본 경제요소를 강제몰수 또는 국유화하고 외국 자본가를 강제 추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963년 기업 국유화법에 따라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추방되었다. 인도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우 누 정권과 네윈 정권은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우 누 총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 한편, 네윈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실

혈을 위한 선택이라며, 폐쇄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네윈이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인도와 미얀마의 관계는 소원해진다. 구체적으로는 1964년 네루 총리의 사망과 중국, 파키스탄과의 분쟁, 미국의 원조 개시 등의 국제환경 변화가 있었다.

미얀마가 비동맹운동에서 탈퇴함에 따라 1980년대 동남아의 국제관계는 복잡해졌다.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해 소련과 인도가 동의함에 따라 미얀마 주변국은 차례로 공산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와 미얀마는 비동맹중립노선을 유지했으나 상호의존과 교류는 순탄하지 못했다. 1984년 칫 홀랑잉 미얀마 외무장관과 이후 네윈의 인도 방문 당시, 인도 라오 총리는 남아시아 지역협력체에 미얀마의 참여를 제안했지만 미얀마는 거절했다. 1987년 라지브 간디 총리가 미얀마를 방문하여 양국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Thin Thin Aung and Soe Myint 2001).

유럽국가 역시 미얀마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네윈 정권 이후 영국과 미얀마의 외교정책에는 발전과 후퇴 등의 큰 변화는 없었다. 네윈은 언어를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1974년 사회주의 헌법을 미얀마어로 단독 출판하고,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제했다. 그러나 네윈의 장녀가 영국 의학교 시험에 낙방하여 고등교육에 영어를 포함시키고, 당시 엘리트와 민족주의자 네윈도 영국을 선진문물의 전수자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보았다(Kyaw Yin Hlaing 2007). 따라서 영국은 우 누 정권에 이어 네윈 정권에서도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하고 있었다(Liang 1990).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유지했던 서독의 경우, 1963년 양국은 무상원조 및 차관 지원과 관련한 교류의 대상을 확대했고, 1969년부터 1986년까지 무상원조와 차관을 포함한 총 4억 1,970만 달러를 지원

했다(Liang 1990). 프랑스의 경우 버마원조그룹이 조직되면서부터 이를 통해 경제원조를 실시하였다. 1976년부터 10년간 철로, 도로 등의 사회간접시설망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유무상 원조금액은 총 4,180만 달러이다. 서독,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 프랑스는 미얀마의 4번째 교역 대상국으로써, 미얀마는 1958년부터 1987년까지 5,611만 달러를 수출하고, 2억 6,455만 달러를 수입했다(장준영, 2012). 캐나다는 콜롬보 계획을 바탕으로 미얀마에게 무상원조를 실시했고, 북유럽 국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국가는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의 교역을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다(장준영 2012).

미얀마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에 대해 중국과 달리 소련과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의 국가들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네윈 정권의 사회주의 전환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미얀마의 관계 개선과 발전 및 경제교류의 확대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미얀마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에 대해 중국은 소련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지적한 반면, 소련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미얀마에 대한 즉각적인 경제 원조를 시작했다(장준영 2012). 1962년 소련 부총리 미코얀은 미얀마를 방문하여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기관에 러시아어를 도입하고, 네윈은 소련을 방문해 평화공존 원칙과 제네바 회담에 기초한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Liang 1990). 1965년 미코얀 부총리가 미얀마를 재방문하여 제 2차 반둥회의와 베트남전과 관련해 소련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지만 미얀마는 비동맹노선을 이유로 거절했고, 이는 앞선 언급한 중국 국제분쟁에 대해 미얀마가 지지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소련에 편향된 외교관계를 선택하지 않았다(BSPP 1973b; 장준영, 2012;2018).

소련은 1967년 반화교 폭동에 대해 중국의 미얀마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중국을 비난하고 미얀마에 군사 원조와

경제적 원조 확대를 선언함으로써,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Horn 1975). 그리고 1971년 24차 전당대회에서 브레주네프 공산당 서기장은 시리아, 알제리, 통일아랍공화국과 미얀마를 비자본주의 발전 노선에 앞장 선 국가라고 긍정적 평가를 하며, 같은 해 10월 포드고르니가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양국의 관계는 최상의 수준이었다(Liang 1990).

소련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의 우려로 이어지고, 소련의 캄보디아 침공 동조에 대해 미얀마는 중립을 지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7년 네윈은 친소련 인사를 축출한다. 특히 비동맹운동에서 미얀마의 이탈은 소련의 관계 증진을 더욱 어렵게 한다. 중국과 소련은 미얀마에 각종 지원을 통해 자국의 우방국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미얀마는 1956년 소련의 헝가리 침공과 1979년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대해 비난과 항의의 입장을 표명했다(장준영 2012).

3. 신군부 정권 시기(1988년 - 2010년) 외교 정책과 변화

1988년 미얀마 신군부 정권은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통치의 정통성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신군부 정권은 1988년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던 시민들에 대하여 공산당과 결탁한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세웠으며, 아웅산 수찌를 비롯한 민주 인사 역시 제국주의와 결탁한 국가전복 세력이라 주장한다.

신군부 정권은 네윈 정권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하고, 구체제의 청산을 위해 국가 전반의 운영원칙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은 독립적이며 활동적이니 방향으로 그대로 계승함에 따

라 비동맹중립외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장준영 2012; 2018). 그러나 신군부는 미얀마 역사 인식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제거하면서 독립적, 활동적 외교 노선을 계승하는 부분적인 유화정책을 선택했으나 소극적 입장을 취하며 안정적인 정권 유지에 집중한 편협한 시각에 그쳤다. 이는 외교정책을 능동적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닌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왜곡된 세계관을 형성하고 구축하는 추진 요인이었다는 평가가 따른다(SLORC 1988).

한편 이 시기 신군부 정권은 탈냉전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나 신군부 정권의 외교정책은 소련의 붕괴와 미국 패권주의의 확산에 따른 국제질서의 재편 및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기보다 신군부의 집권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국외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고, 쿠바와 이란, 시리아, 알바니아, 나이지리아 등 24개의 비자유주의권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한 1975년에 아르헨티나, 1982년 칠레, 브라질 등 남미권과의 외교관계가 결정되었다(장준영 2012).

소련의 붕괴에 따라 냉전 종식 이후 인도는 중국의 세력 확대를 인지하고 외교 노선에 대한 다양화를 요구했다(Mansingh 1994). 러시아와 중국의 화합 그리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중국의 군사동맹 수립 그리고 아세안의 성공적 행보에 따라 인도는 고립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장준영 2012). 이에 인도 정부는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천명하며 중국과의 경쟁 노선을 선택했고, 냉전 종식 이후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 패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며 국제적 패권 경쟁 구도를 담당할 수 있는 반열에 오르기 위한 새로운 외교 노선을 마련하고자 했다(Malik 1995; Hilali 2001).

인도의 새로운 외교 노선은 동방정책을 바탕으로 하며, 동방정책은 1991년 라오 총리의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국가 방문 이후

동아시아 특히 경제 성장을 이룬 아세안에 주착하는 것이다. 인도는 이와 같은 동방정책을 바탕으로 소련 의존 구도 탈피, 다자간 대화 채널 구축 등의 외교정책을 선택하고, 중국과의 경쟁 노선 본격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추구하였다.

인도의 동방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영향권 아래 있는 미얀마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없고, 국내적으로 고립된 동북부 5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지역은 동남아 진출의 유일한 육로이자 소수종족의 무장투쟁, 이들의 마약 생산과 유통 등의 새로운 안보 문제가 존재하는 곳으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장준영 2012). 1988년 신군부 정권 이후 1992년까지 미얀마와 인도의 관계는 적대적이었으나 1993년부터 마약과 소수종족 등의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 디싯 외무부 서기관의 미얀마 방문은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했다.(Haacke 2006).

1992년 중국은 미얀마 군사시설 근대화와 군비 지원에 대해 인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비난하며 대꼬꼬 섬을 시찰했고, 인도 역시 미얀마로의 군사 진출 계획을 실행하고 중국으로 인해 생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인도는 중국보다 우수한 해군 군수물자를 미얀마에 판매하고 정보 수집 교육을 지원함에 따라 중국의 군사 확장 계획을 간파할 정보력을 갖추게 된다(Egreteau 2008). 2000년 마웅에 부의장의 인도 방문을 통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한 양해각서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 밀매, 치안 불안 등의 문제를 공동의 군사행동을 통해 다루고자 했다.

인도는 미얀마 진출을 위해 항구 근대화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IT산업 원조에 초점을 맞추고, 딴쉐 의장은 2010년 버강 유적지 복원사업, 교육센터 건립, 공장 건설 등을 통해 중국 보다 먼저 협력하기로 서명하였

다. 따라서 미얀마는 중국에 편향된 원조와 지원을 다양화할 수 있고, 중국과 차별화한 원조를 통해 입지를 다지고자 했다.

한편 아세안과의 관계도 탈냉전을 거치며 변화한다. 냉전 시기 아세안은 미얀마의 영향력 아래 주변국인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의 공산화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고, 냉전 종식 이후 공산화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동남아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의 강대국이 지향하는 경쟁의 노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 이후 중국의 미얀마 편중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의 우려는 증대되고 미얀마도 기존의 폐쇄주의와 국제 고립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되었다(Maung Aung Myoe 2006).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해 미얀마도 자국의 중국 영향력 증대에 대해 우려하며, 아세안은 회원국의 확대와 결속력 강화를 통해 탄력성을 심화시켜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Moller, 1998). 따라서 하나의 동남아를 현실화하고자 지역 연대의 강화, 중국과 미국, 인도 등 강대국의 영향력 최소화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이와 같이 유럽국의 아세안 압력, 미얀마 정치문제 해결, 중국의 동남아 확대와 이에 대한 우려 해결 등의 미얀마 안보위기를 동남아 지역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장준영 2012).

1997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 외무장관회담에서 미국의 인권유린을 이유로 아세안 회원자격 연기 신청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아세안 가입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정권의 점진적 변화, 개방을 유도하는 '건설적 개입' 노선을 통해 서구국가의 미얀마 경제제재와 같은 강경책에 대한 무용성을 주장했다(Maung Aung Myoe 2006). 미얀마는 폐쇄를 탈피하고 경제발전의 경로 진입을 위해 아세안에 가입한 반면, 아세안은 아우산 수찌의 석방을 건설적 개입의 결과물로 보았다.

훈센 총리의 쿠데타로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이 연기되고, 인도네시아

의 연무 문제에 대해 아세안이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태국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금융위기 확산됨에 따라 동남아의 안보 문제 직면, 말레이시아 부총리 안와르의 체포에 대한 주변국의 비난, 아세안 회원국 간 감정 대립 및 비난은 아세안의 갈등을 증폭시켜 전통적인 아세안 문제 해결 방식을 재검토하게 되었다(Funston 1999; Katsumata 2004). 2002년 브루나이에서 개최한 아세안 외무장관회담에서 지역 공동의 문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한 효율성을 재확인 했다고 설명하며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정책의 변화를 암시했고, 태국 쑤린 외무장관이 제시했던 '관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필리핀은 관여정책에 대해 기존의 불간섭정책에 도전적이고 새로운 규범이며 아세안의 모호한 외교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로써 제안했다(Haacke 2005).

한편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아세안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아웅산 수찌의 가택연금을 이유로 미얀마의 아세안 영구 제명을 주장하며,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아세안 의원 모임'을 구성하여 석방 요구, 민주적 체제 전환을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아세안 의장국 진출을 봉쇄하고 아세안에서 미얀마를 영구 제명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장준영, 2012).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과의 타협을 통해 잃을 것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의장직을 포기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후 2011년 미얀마의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으로써 지역의 협력 확대, 통합 심화를 위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중국에 대한 편중 심화로 아세안 회원국의 안보 딜레마를 자극하며 민주화 지연, 인권탄압으로 미국은 미얀마를 폭정의 전초기지로 정의했다(Aung Zaw, 2005).

서구 국가의 경우 미얀마 신군부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는 1988년~2008년 부시 2기 정부까지 적대기,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개입기로 정의할 수 있다. 1988년 전국적 규모의 민주화운동인 8월

항쟁의 실패 당시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외교정책은 방임 수준이었고, 이후 쏘 마웅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 정권 장악에 성공하자 미국, 호주, 인도, 서구국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비난하며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또한 일본과 서독은 이들과 함께 미얀마의 정치 개혁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원조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Lintener 1989).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문제, 마약 등을 이유로 1990년부터 미얀마 군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얀마 군부의 총선 결과 인정과 민간정부로의 정권 이양을 통한 인권 준수 등 민주국가의 건설을 요구하며, 미얀마에 대한 미온적 입장에서 반군부, 친아웅산 수찌 정책으로 외교 노선을 변경한다(ICG, 2008; Steinberg 1999b).

또한 1997년~2001년 제2기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의 미얀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재를 실시하며 유럽연합과 금수조치, 미얀마 공무원의 여행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 미얀마산 제품의 미국 불매운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운동가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2003년 법령으로 정해져 펩시콜라의 미얀마 투자 철회에 이어 유럽의 하이네킨과 칼스버그 등 맥주회사와 에릭슨 등의 모바일 기업도 미얀마에 대한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Zaw Oo 2006). 이러한 움직임에도 디베인 학살, 샤프란 혁명, 아웅산 수찌 가택연금 등의 사건 등에 따라 2003년 제재법령은 강화되었다.

2002년~2005년 제1기 부시 행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압박정책을 정교화하여, 미얀마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당시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이란,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미얀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Haacke 2006). 미얀마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아웅산 수찌 비호 발언에 대해 반미 감정을 표출하고 미국을 신제국주의자로써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장준영, 2012). 이에 미얀마 군부

의 응집력과 결속은 강화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의존도 역시 심화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바탕을 두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개입정책으로 외교 노선을 변경했다. 하지만 2009년 미국의 미얀마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인 짐 웹 상원의원이 아웅산 수찌를 만나고,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미얀마 방문 등이 이루어 졌으나 미국의 변화된 정책과 달리 미얀마는 여전히 수동적 입장을 취해 양국의 관계 발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유럽과 미얀마의 관계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냉각기로 정의할 수 있으나 유럽은 지역 패권을 위한 압박을 행사하기보다 건설적 개입의 요충지로 보았고, 또한 아세안을 지역 협력체로써 미얀마의 군부정권 문제 해결과 인권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은 민주화 문제와 인권문제에 따라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밝히며, 인도주의적 원조와 인권문제에 중점을 두었다(Christie and Roy 2001). 유럽에서 다루는 미얀마에 관한 의제는 강제수용소, 강제노동, 소수종족 문제, 인권문제와 정치범 문제이고 특히, 미얀마의 경제, 교육, 보건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이에 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패권 경쟁, 미얀마 천연자원 수급 등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달리 유럽연합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인권문제, 비인도주의적 원조 중지, 미얀마산 농산물과 공산품 수출 특혜 철회,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금지, 테러 등의 도구가 되는 물품 판매 금지 등의 수준이었다(Haacke 2006). 이처럼 유럽연합은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고 군부정권의 약화, 정치범 석방, 인권수준 강화, 소수종족 문제 해결에 따른 제재 철회와 원조 확대의 입장을 보였다.

4. 소결

상술한 미얀마의 독립 이후 외교 정책은 비맹중립노선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1971년 BSPP 전당대회를 통해 외교정책은 자유성, 활동성이 보장된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런 노선은 1988년 신군부 정권에서도 계승되어 정권의 성향과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독립 당시 선택된 외교정책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장준영, 2018). 독립 이후 미얀마는 자국의 재건과 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소련과 중국 등의 주변국과 미국, 유럽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며 편승 정책을 유지하며 일정부분 등거리 외교정책을 병행하면서 영국에게 다시 주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상기시키며 외교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네윈 정권 시기 외교정책은 우 누 정권에 비해 급진적, 폐쇄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독립 이후 비동맹중립노선을 바탕으로 외교 노선을 선택했으나, 국제적 연대가 위태로워지자 미얀마는 비동맹중립에서 탈퇴를 결정하고, 자력갱생의 발전 노선을 이유로 군부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여 외부 주변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1988년 신군부 정권은 외교관계를 학대하고자 했으나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군부에 대해 중립적인 성향이 강했고, 자국에 대한 지지를 입장을 밝히는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변화를 보인 것은 2012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집권이다. 오바마는 미얀마를 방문하며 미얀마와 미국의 활발한 군사교류의 가능성이 제기하였고, 이에 중국은 자국의 우호관계인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한편 2011년 대통령과 아웅산 수찌 간의 회담이 진행된 이후 개혁개방과

자유화 조치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란 평가를 받던 미얀마의 외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제재에 대해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친중 성향의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전환을 시도하며 미얀마 진출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강대국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특히 2011년 이전까지 미얀마의 외교정책이 강대국에 편승한 것과 달리 신정부는 비동맹중립기조를 중심으로 세력 균형자 역할을 시도하였으며, 동시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헤징전략으로 전환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에는 다시 한 번 변화의 계기가 생기는데, 바로 로힝야 사태이다. 로힝야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 미얀마 문민 정부에 대해 호의적인 움직임을 보인 서방국가의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경제적 제재의 움직임까지 보였다. 반면 중국과 인도의 경우 로힝야 문제에 대해 미얀마에 대한 지지를 보내었으며, 특히 중국과 미얀마는 과거보다 더욱 가까운 관계를 성립하기에 이른다.

Ⅲ. 중국의 외교 정책

1. 중국의 외교 정책 변화 과정

중국의 대외 정책은 크게 두 번의 변화를 겪었다. 1949년 정권 수립 이후 1960년대까지 중국의 대외정책은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 여겨져 세계혁명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실천에 방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진호 2010). 반패권주의와 독립이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강조되었고 외교에 있어서 소련과 미국, 제3세계가 일차적 고려사항이었다(박병관 2015). 이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은 대소일변도 정책을 펼쳤는데, 중소 우호 동맹 상호원조조약(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을 체결하며 구체화된다(김옥준 2009). 소련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중국에 있어서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는데, 소련의 원조를 통해 공업 부문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중국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양안 관계와 국제 사회의 진출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 관계 수립을 통해 국가로 인정을 받아 양안 간의 대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스탈린 이후 1950년대 중반 중·소 양국 간에는 이념적 차이에 기인한 대립이 형성된다. 소련공산당은 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평화공존과 평화경쟁으로 대변되는 신사고정책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긴장 관계 완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빚었던 중국에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특히 1962년 인도와의 분쟁에서 소련의 인도 지지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이는 1966년 양 공산당 간의 관계 단절과 1969년 전바오다오(珍寶島)에서의 무력 충돌로 이어진다. 중국은 소련에 대한 안보위협을 인식하게 되었고 독자적인 핵 개발로 이어진다.

또한 베트남에서 미국의 개입은 중국으로 하여금 친소일변도 정책의 변화를 유도한다(정차근 2018).

다만 대립 관계를 보여왔던 국가와의 관계 재정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일본과의 '중일 평화 우호조약',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국제사회로의 진출이 이루어진다. 또한 반패권주의와 세계평화 유지, 제3국가와의 단결과 협력이 대외교류 기본 준수정책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대립에서 평화, 비동맹 정책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인도, 미얀마와 공동으로 발표한 평화 공존 5대 원칙을 통해 잘 드러난다.

덩샤오핑 집권 시기 대외 인식은 덩샤오핑 집권 이후 변화를 겪는다. 기존의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이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으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는 경제발전의 비롯한 국제교류의 배경이 된다(장베이 2013). 이는 개혁개방 노선과 더불어 혁신적인 전환이란 평가를 받는다. 빛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뜻의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내세우고, 실용주의적이면서 고립주의적인 성격의 대외 정책을 펼친 것이다(박병광 2015).

이어진 장쩌민은 덩샤오핑 시기의 사상과 전략을 계승한다. 다만 냉전 해체와 중국위협론이 부상하는 등 대외 환경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공고화를 추진하게 되며, 상호신뢰와 상호이익, 평등, 협력 이란 신안보관이 정립된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다극화 전략에 기초하여 다자협력체제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장쩌민 집권 시기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공과 국력 성장을 바탕으로 대외정책과 외교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 책임 대국론을 내세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박병광 2015).

후진타오 집권 시기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경제현대화와 국내정치의 안정

을 바탕으로 강대국 지위 획득이 목표로 자리 잡는다. 소위 화평굴기(和平崛起)와 조화로운 세계가 주창된다. 외교의 중심이 기존의 미국에서 벗어나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는 등 탈 미국화 전략이 운용되었다(김홍규 2015).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다시금 변화를 맞이한다.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색채가 강조되어 안정을 중시하던 기존의 개혁개방 시기의 대외정책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장원). 강대국 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이정남 2018). 다만 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핵심사상과 이념적 측면에서 지속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화발전과 조화세계 등의 기본 이념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박병광 2013). 또한 후진타오 시기와 달리 강대국 외교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줄어들고 주변국 외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평가도 따른다(김홍규 2015).

그러나 영토와 영해, 주권 등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줄기차게 주창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형대국관계 건립을 주장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시진핑 체제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AIIB(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일대일로의 경우 2013년 9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여 경제권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내부적으로는 서부지역에 대한 불균형 발전 해소와 성장요인 재창출을, 국외적으로는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김옥준 2015).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시진핑 정부의 권력 공고화나 개혁 개방과 같은 중국 내부의 배경에 따른 것이란 평가도 있지

만, 미·중간의 관계에서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 대한 대항적 성격에서 그 배경을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박광득 2015). 미국 주도의 질서에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신형대국관계가 그 배경에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증진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관계 강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이성량 2018). 특히 AIIB가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 융통 혹은 재정 확충 역할을 수행한다는 시각도 다분하다(최재덕 2018).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팽창적 전략은 타 국가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먼저 일대일로와 AIIB는 공통적으로 경제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먼저 AIIB의 경우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인도양 장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이로 파생되는 이익을 중국이 독점한다는 불만과 개발에 따른 대상국의 부채 급증 문제는 각국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가지게 하였다(최재덕 2018), 대표적으로 파키스탄과 캄보디아의 경우 부채와 무역적자가 급증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기도 하였다.[2)]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되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 지역 다자구도론 혹은 이를 넘어서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통한 대 중국 견제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양국 간의 갈등의 뿌리는 잔존하였지만,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상호 간의 인정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였다(박철희 외 2014).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북핵 문제 등에 있어

2) 연합뉴스 .2019.5.5. “시진핑의 야심작 '일대일로' 프로젝트, 부채 문제 암초,” https://www.yna.co.kr/view/AKR20180808071300009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압박하였으며(박원곤 2017), 일방주의적 기조의 강화 가운데 환율과 무역을 무기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다. 이는 곧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에 따른 것이란 시각보다는 패권 경쟁의 일환에서 벌어진 것이란 시각이 강하다(김관옥 2018).

2. 중국의 에너지 외교

중국의 에너지 외교(혹은 자원 외교)는 핵심외교 가운데 하나로 강대국과 주변국 외교에 이어 제3의 외교로 평가된다(김정기 2012). 중국은 경제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자원 확보를 위해 외교와 경제협력을 연계한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자원 확보 등의 에너지 외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1960년대 자체 석유 개발에 착수하여 1973년 석유 수출을 시작한 중국은 80년대 중반까지 외화의 상당 부분을 석유 수출을 통해 확보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는 1993년 순 수입국으로 전환시킨다(박기철 2010).

이에 따라 자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 역시 두드러져 1997년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구체화 된다. 해당 정책에서 해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입의존도 감소와 중동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지 발굴, 자원 구매의 다원화, 투자 촉진, 안정적인 수송로의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에너지 외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더욱 강조되었는데, 아프리카를 통한 원유 수입의 다변화와 중앙아시아를 통한 육상운송로 확보, 동남아시아의 해상 수송로의 안정이 부상하였다(주재우 2003).

이러한 모습은 시진핑 집권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신에너지정책의 연

장 선상에서 에너지 다변화 전략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경제벨트 조성을 통해 에너지 공동안보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주용식 2015).

구체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 전략으로는 대규모 원조나 부채탕감, 투자 확대 등의 경제협력과 교육과 문화, 평화유지군 파견 등 소프트파워의 활용을 병행하였다(김정기 2012). 다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중앙아시아의 경우 공동개발을 비롯한 다자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양자주의적 행위 패턴에 기반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김기정·천차현 2009).

이러한 신에너지정책은 상당 부분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 석유를 확보하였다(박기철 210). 과거 중동 지역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이 60%를 넘었으나 2007년에 이르러서는 40%대로 낮추었으며(김기정·천차현 2009), 특히 ODA 정책과 연계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유 확보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다. 대표적으로 앙골라의 경우 2015년 기준 중국의 원유 수입량 가운데 14%를 차지하여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3] EIA의 국제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앙골라의 원유 생산량이 14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에너지 외교를 통한 수급의 다각화가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 외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역내의 정치와 현지의 복지, 일자리에 무관심하고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안세현 2012). 중국의 에너지 외교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현지 정세 등을 고

3) 중국의 창. 2017.2.14. “중국의 원유 수입 가파른 상승, 수입 의존도 60% 초과.” http://korean.cri.cn/1740/2017/02/14/1s244340.htm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려하지 않고 서방의 제재나 분쟁 중인 위험지역의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실리외교 정책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특징(김정기 2012)이 오히려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자원 확보 과정에서 패권 국가와의 충돌 가능성이 위협으로 떠오른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구소련시절부터 지속된 러시아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며, 아프리카에서 미국과의 경쟁 관계가 양 국가의 대립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김기정·천차현 2009).

3.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정책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정책은 대외정책의 방향과 그 궤를 함께하였다. 특히 소련과 미국이란 강대국의 견제 수단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활용이 눈에 띈다. 정권 수립 직후 동남아시아, 특히 ASEAN에 대해 중국은 반중국반공동맹(反中國反共同盟)이란 인식이 강하였다(김진호 2010). 이러한 시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1972년 닉슨 방중에도 불신의 시각은 지속되었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국가에 대해 비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한 것이다(이주형 2011).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 악화는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시각에 변화를 유도한다. 소련의 남진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 동남아시아 정책이 부상하였으며(김진호 2010), 베트남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의 패권 추구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주형 2011)이 대두된다.

특히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현대화라는 목표 아래 역내 국가 간의 본격적인 협력이 추진되어, 1991년 ASEAN과의 정식 관계 정립이 이루어진다(김진호 2010). 다만 이에 대해서는 9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대외정책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탈냉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

히 중미 관계가 중시되었으며, 강대국 관계의 연장에서 지역 국가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탈냉전 이후 형성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 대한 견제자로서 동남아시아의 역할이 재평가된다(이주형 2011).

이러한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였다. 중국은 환율 평가 절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긴급구호자금을 제공함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과거 중국위협론에서 비롯된 안보 불안 요인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데 성공한다(한석희 2008).

현재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외 전략 목표는 자국의 발전전략에 방해받지 않는 평화로운 환경의 유지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원의 공급처이자 상품의 시장으로 파악하고 있다(설규상 2009). 구체적으로는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기존의 지역 협력기구를 활용한 자국의 경제발전과의 연계로 정리할 수 있다(이선진 2010). 그러나 경제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러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위협이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0년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자국의 핵심이익임을 천명하였다(오윤아 2018).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분쟁은 비단 근시기에 형성된 문제는 아니다. 1974년 이후 여러 차례 무력 분쟁을 겪은 이후 2002년 '남중국해 행동 선언'을 통해 현상 유지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가스전 개발 움직임과 중국의 팽창적 대외정책,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등이 맞물려 2010년대 다시금 분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2012년 중국은 제18차 중국 공산

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해양강국 건설 의지를 천명한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해양 이익 확대를 통한 국력 증대를 언급한 것으로 향후 해양을 통해 국가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평가된다(안슬기 2019).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해양사상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정책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석유 수입량의 8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가치가 크다[4]. 뿐만 아니라 연간 5조 달러 규모의 해상 운송이 이루어짐은 물론, 상당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IE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원유 110억 배럴과 천연가스 190조 큐빅 비트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며, 중국 국영 석유업체 중국해양석유(CNOOC)는 이보다 많은 원유 1,200억 배럴과 500조 큐빅 비트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한다.[5] 남중국해가 현재 중국의 경제적 기반을 가진 것과 동시에 미래 중국의 경제적 이익도 함께 내재된 소위 핵심이익이 결부된 지역인 것이다. 때문에 국제상설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2013년 영유권 불인정[6]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중국해의 대립과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의 200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성립은 물론 2005년 중국과 아세안 간의 FTA 발효를 통해

---

4) 중앙일보. 2013.11.30. “미·중 남중국해 충돌 바탕엔 오일루트,” https://news.joins.com/article/13274681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5) 조선비즈. 2015. 10. 27. “[불붙은 자원전쟁] 자원보고 남중국해 놓고 미·중 충돌 위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7/2015102702421.html 검색일: 2019년 3월 16일.

6) 경향신문. 2016.07.12. “[남중국해 ‘격랑’ 속으로] 상설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중 영유권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7122333015#csidxb0f4eb909f572b38fe4cdfa7851a890 검색일:2019년 3월 10일.

경제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 집권 이후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표출되었는데, 특히 일대일로에 따른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가치의 부상은 중국으로 하여금 동남아시아에 대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였다(오윤아 외 2017). 대표적으로 미국 주도의 TPP에 가입하지 못한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에 대해서는 투자와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정혜영 2017). 또한 중국의 주도로 2014년 설립된 AIIB는 2016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승인하기도 하였다(안령 2016).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천명 이후 해상 실크로드의 기착지로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의미가 확대된다.

이에 대해 동남아시아국가들은 중국을 통한 경제성장 기회의 포착을 노리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경쟁이 야기할 피해를 우려하여 균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시각이 크다(오윤아 외 2017).

4. 소결

일련의 중국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외정책이 지도부 교체를 통한 대폭적인 변화 추구보다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음을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대외 정책의 변화는 에너지 외교와 대 동남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대외 정책은 크게 두 차례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개혁·개방을 시행한 덩샤오핑 집권을 전후로 중국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채택하여 이전의 전쟁 불가피론을 벗어나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기조는 후진타오 집권기까지 지속된다. 안정적인 성장이 제1의 목표가 되어 에너지 외교와 대 동남아시아 전략도 그에 뿌리를 두었다. 목표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였고, 이는 아세안과의 본격적인 관계 정립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안정적

인 성장을 뒷받침할 자원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에너지 외교에 나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자원 수급의 다각화를 이루었다.

중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두 번째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시진핑의 집권은 이전보다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보였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교류의 증진,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창하였으며, AIIB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에너지 외교의 기본 전략은 이전의 1997년 주창한 신에너지정책의 계승과 발전으로 지속되었다. 특히 해양의 가치가 이전보다 더 높아져 남중국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향력 행사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대 동남아시아 전략에서는 일대일로와 AIIB의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 정책의 변화는 미얀마와의 교류, 그중에서도 자원 교류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먼저 군정 종식 이후 미얀마의 경제발전 필요성과 중국의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는 육로 가스관 연결을 통해 중국에 대한 에너지 자원의 수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미얀마는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자원 교류가 가능하며, 이는 2013년 실현되었다.[7]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타 국가 간의 마찰이 빚어낼 가능성이 높은 중국 경제의 주요한 수송로의 위협을 인도양에 위치한 미얀마의 항구를 통해 우회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영향력 확대, 그 가운데에서도 인도양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미얀마와의 관계 강화는 이룰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미얀마의 항만 개발에 중국은 7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추진한다.[8]

---

7) 아시아경제. 2013.07.30. “중국-미얀마 가스관 열렸다..정식 가동 시작,” https://www.asiae.co.kr/article/2013073007143597433 검색일: 2019년 3월 16일.
8) 중앙일보. 2017.05.07. “미얀마 최대 항구 ‘일대일로’ 거점 된다,”

Ⅳ. 미얀마와 중국간 자원 교류의 현황과 미래

1.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

미얀마는 중국에 대해 형제자매를 뜻하는 미얀마어인 '바오보(Pauk-Phaw)' 라고 부른다. 이는 두 나라의 가까운 관계를 상징하는데, 미얀마는 중국 이외의 타 국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미얀마와 중국은 2,227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849년 바간 왕국이 건국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갔으며, 1949년 중국의 공산정부 수립 이후 본격적으로 외교 관계가 진전되었다. 미얀마와 중국은 1950년 수교를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성립하였는데, 이는 비공산권 국가와의 첫 수교였다. 또한 인도와 함께 발표한 평화 공존 5원칙을 발표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만 당시 중국의 외교 중심은 강대국과의 관계에 집중되어있었고, 이에 따라 미얀마는 주변국 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5년 미얀마의 중국에 대한 쌀 수출과 중국의 미얀마 방직 공장 증축이 교환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간다(정혜영 2017). 1960년에는 양국 간의 국경이 합의되었으며, 상호간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친소관계는 균열이 생기는데, 이는 인도와 중국의 분쟁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중국과 인도 모두와 인접한 미얀마는 중립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1967년 반중국 폭동과 중국 공동체에 대한 추방으로 양 국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08012008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가의 관계는 악화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67년 미얀마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여 모든 원조를 중단하기에 이른다(정혜영 2017). 또한 1960년대까지 지속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세계의 혁명과 국제주의 실천이란 중국의 외교적 목표(김진호 2010) 아래 버마 공산당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양 국가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

그러나 1978년 네윈의 집권 이후 미얀마는 다시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고,[9] 중국은 버마 공산당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화답한다. 특히 미얀마의 군사정권 하에서 군부의 대외투자 제한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로 고립된 미얀마에 대해서 중국은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1990년대 군사적 지원을 하기에 이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천연자원 수입을 진행하였다(정혜영 2017).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1997년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출품에 대한 면제 특권 등을 통해 양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안득기 2008),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한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 등이 예상되었다. 이는 중국 투자에서 잘 드러난다. 2011년 43억 달러에 달하던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2013년에는 5,70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10] 그러나 중국은 군정 종료 이후에도 미얀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 발생한 로힝야 사태는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

9) 월간조선. 2016.02.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 무역 현장 미얀마 군부의 부패로 물든 중국 보석 비취”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1602100045 검색일: 2019년 3월 20일.

10) 중앙일보. 2019.07.15. “로힝야 난민 사태 그 후…미얀마-중국 '신밀월' 무드,” https://news.joins.com/article/23524943 검색일: 2019년 7월 16일.

서방국가들은 로힝야 사태 이후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언급하며 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하였지만(김정희 2018),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로힝야 문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11] 또한 일대일로 구상 가운데 중국-인도-미얀마 회랑을 추진하며 양 국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에너지 외교에서 보여주었던 행보와 유사하다. 중국은 제도적 혼돈 국가나 UN 제재 국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통해 자원 확보에 나선 바 있다(김정기 2012). 서방의 제재나 분쟁과 같은 위협요인을 파고들어 틈새시장으로 만들어 이를 공략하는 실리외교 정책은 신에너지정책 이후 중국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였다. 이러한 모습이 민정으로 이양된 미얀마에서도 반복되는 것이다.

2. 미얀마와 중국의 자원 교류 현황

<표 1> 미얀마의 대중국 교역 비중 (단위: %)

연도	수입	수출
2008	32	11
2009	37	10
2010	35	12
2011	40	12
2012	37	14
2013	40	26
2014	42	36
2015	44	41
2016	36	33
2017	39	30

출처: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11) 아시아투데이. 2017.10.19. “견원지간 중국·인도,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에는 한마음 한뜻인 이유는?”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019010006732 검색일: 2019년 3월 20일

중국은 미얀마의 제1교역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미얀마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르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이른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민정 이양 이전 10%대에 머무르던 것이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 2> 미얀마의 교역량 (단위: 100만 달러)

회계연도	전체		중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1-2012	9135.602	9035.063	2214.298	2786.835
2012-2013	8977.016	9068.914	2238.07	2719.486
2013-2014	11203.96	13759.51	2913.673	4119.452
2014-2015	12523.72	16633.15	4692.459	5019.629
2015-2016	11136.88	16577.95	4596.961	6395.479
2016-2017	11998.54	17211.06	5055.487	5749.286
2017-2018	14850.66	18686.95	5699.348	6086.78

출처: 미얀마 상무부

이는 교역의 비중뿐만 아니라 교역량 자체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다. 미얀마의 대중국 교역은 수출과 수입액 모두 2017-2018 회계 기준 2011-2012 회계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을 포함한 전체 교역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함의하는 바가 크다. 표에서 보이는 기간은 미얀마의 경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 2012년과 완전해제가 이루어진 2016년을 포함하고 있다. 표에서는 이들 시기를 거칠 때마다 미얀마의 교역량이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을 함께 비교하였을 때 과연 미얀마의 교역량 증가가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완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미얀마 교역량 증가의 절반가량을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미얀마의 수출에서 석유가스(Petroleum)의 비중 (단위: %)

연도	비중
2008	50
2009	43
2010	40
2011	40
2012	41
2013	37
2014	38
2015	36
2016	40
2017	27

출처: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천연가스의 경우 미얀마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라 할 수 있다. CIA FACT BOOK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천연가스의 경우 637.1Bcm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세계 29위 수준의 매장량이다. 또한 천연가스의 연간 생산량은 18.41Bcm이며, 이중 대다수인 14.07Bcm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얀마의 민정 이양과 경제 제재 완화 이후 석유가스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표에서 잘 드러나는데, 경제 제재 완화가 완전히 해제된 2016년 이후 미얀마의 수출에서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7%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미얀마의 산업별 GDP 비율 (단위: 십억 짜트, %)

	계	1차		2차		3차	
2000	2553	1461	57.23%	247	9.67%	844	33.06%
2005	12287	5736	46.68%	2152	17.51%	4399	35.80%
2011	46308	15048	32.50%	14491	31.29%	16769	36.21%
2016	79721	20300	25.46%	27917	35.02%	31503	39.52%

출처: 미얀마 상무부, 미얀마 통계청, CSO, 2017 회계연도 기준 2019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코트라 재인용

이는 군정 이후 신정권에서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 변화를 추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얀마 경제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수출에 절반 이상을 여전히 천연자원과 농업 생산품이 차지하는데, 2016년 신정부는 12가지 경제정책을 발표하여 경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의 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현아·김은희 2016).

일련의 미얀마와 중국의 천연가스 교류를 정리하면 상당 부분 성장 이후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제재 완화 이후에도 미얀마에 대한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의 개발·탐사 움직임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조경연). 더군다나 미얀마 신정부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질 개선 움직임 등은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 개발이 이전과 비교하여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판단된다. 따라서 미얀마와 중국과의 에너지 교류는 성장세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전망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미얀마의 지하자원과 경제개발의 필요성은 중국의 에너지 수요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중국은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2009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올라섰으며, 그 증가세는 여전하다.

<표 5> 중국과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 및 증감률 (단위:Mtoe, %)

연도	중국		미국	
2004	1,615	-	2,308	-
2005	1,782	10.3	2,319	0.5
2006	1,950	9.4	2,297	-0.9
2007	2,099	7.6	2,338	1.8
2008	2,155	2.7	2,278	-2.6
2009	2,297	6.6	2,165	-5.0
2010	2,536	10.4	2,218	2.4
2011	2,723	7.4	2,192	-1.2
2012	2,821	3.6	2,152	-1.8
2013	2,912	3.2	2,196	2.0
2014	2,965	1.8	2,217	1.0
2015	2,994	1.0	2,194	-1.0
2016	2,965	-1.0	2,175	-0.9
2017	3,051	2.9	2,180	0.2
2018	3,164	3.7	2,258	3.6

출처: Global Energy Statistical Yearbook 2019

이 가운데 천연가스의 소비가 눈에 띄는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천연가스의 소비량은 에너지 소비량보다 더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천연가스 소비량의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연간 94.8Bcm으로 세계 2위의 LNG(Liquefied Natural Gas) 수입국이다. 이는 전년 대비 26.9%가 증가한 수준이다.[12)]

<표 6>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 (단위: 10억m^2)

연도	소비량
2006	59.3
2007	73
2008	84.1
2009	92.6
2010	111.2
2011	137.1
2012	150.9
2013	171.9
2014	188.4
2015	194.8
2016	210.3

출처 : BP(British Petroleum), 윤호준(2017) 재인용

이러한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는 향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천연가스의 1차 에너지 소비 비중 확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3)] BP의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240Mtoe로 예상되는 중국의 가스 소비량은 2040년에는 641M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14)]

12) 지앤이타임즈. 2018.11.15. "中 천연가스, 어디서 얼마나 수입 하나 살펴보니,"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7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13) 이투뉴스. 2018. 08. 02. "중국,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10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중국은 천연가스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에너지 외교에서 잘 드러난다.

이미 미얀마는 중국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처이다. 2017년 기준 중국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94.6Bcm) 가운데 PNG(Pipe Natural Gas)를 통한 수입(42Bcm)은 44.4%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74%로 가장 높았으며, 미얀마(8.29%)는 우즈베키스탄(8.30%)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미얀마와 중국 간의 자원 교류에는 단순히 미얀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마데섬과 중국 쿤밍 간의 송유관은 미얀마의 천연가스를 나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원유를 운송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15]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는 자회사와 중국 국영 석유 회사 CNPC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다. 양해각서에는 미얀마를 통해 윈난성에 하루 2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는 것을 담고 있다.[16] 이는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우회할 수 있어 중국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하면,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량 증가와 환경계획에 따라 중국 내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추어 중국은 미얀마를 통한 PNC 공급을 준비하였으며, 이미 실현되었다. 또 이러한 루트는 단순히 미얀마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의 중국 내 공급뿐만 아니라 원유 운송 역할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에너지정책에 부합한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향후 미얀마의 본격적인 경제개발 과정에서 지하자원에 대한 개발과 탐사에 중국의 참여

14) BP. (2019). energy outlook. BP Publishers: London.
15) 연합뉴스. 2017. 04. 11. “중국, 미얀마에 영향력 확대…대규모 송유관 곧 가동(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1080351083 검색일: 2019년 3월 16일.
16) Reuters. 2011.03.20. “SaudiAramcotosupplycrudetonewPetroChinarefinery.arabfinance.” https://www.arabfinance.com/en/news/details/world-companies/190465 검색일:2019년 3월 16일.

가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로힝야 사태 이후 미얀마 민정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불신은 중국과 미얀마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먼저 미얀마 경제 여건 변화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얀마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의 경제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섬유와 의류를 향후 수출 전략으로 삼고 이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후 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또 본격적인 경제 개발 과정에서 미얀마 자체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이는 단순히 미얀마에만 국한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인접한 아세안 국가들은 가파른 경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중국에 있어서 에너지 확보 경쟁에 경쟁자가 생겨나는 것을 뜻하며, 추가적인 에너지 확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미얀마 내부에서 발생하는 중국에 대한 반발이다. 과거 중국은 미얀마 내부의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북부 카친 주에는 미트소네 수력발전 댐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6,000Mw의 전력을 생산하여 90%를 중국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17] 그러나 댐에 대한 안전성 의문 등에 따라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최근 중국은 댐에 대해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여전히 미얀마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미얀마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반발 역시 시민사회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과 파키스탄 간

17) 연합뉴스. 2018.09.14. “중국, 미얀마 미트소네 수력 발전소 살리기 안간힘.”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4060800076 검색일: 2019년 3월 22일.

의 경제회랑 프로젝트로 인하여 9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임 총리는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하였다.[18] 또 스리랑카는 일대일로 참여로 인해 생긴 부채를 갚기 위해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19]

미얀마에서도 경제 회랑에 대한 참여가 이전보다 미온적이다. 차우크퓨 항에 대한 개발이 시도되었으나, 부채 가중 등의 이유로 사업이 보류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이전보다 사업이 축소된 16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결정되었다.[20] 일대일로에 대해서 중국의 이익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는 반발은 미얀마와의 자원 교류에도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 송유관 건설 사업에서 이러한 반발은 반향을 일으켰다.[21]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미얀마 정부에게 꾸준한 외화 창구로 역할을 하여 캐시 카우(Cash Cow)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중국의 에너지 외교 전략에 비추어볼 때 로힝야 문제를 비롯한 미얀마 내부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 증가는 장기적으로 송유관 이용료의 재산정 등의 문제가 불거져 중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이다. 중국과 미얀마 간의 송유관은 반군의 주요 활동 지역을 경유한다. 카친 북부 지역에는 여전히 반군이 활동 중이며 최근까지 정부군과의 대립을 지속하고 있으며,[22] 탕 해방

---

18) 한겨레. 2018. 09. 10. “중 일대일로 사업 삐걱…파키스탄 재검토, 말레이시아는 취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61493.html 검색일: 2019년 3월 16일.
19) 뉴시스. 2018. 08. 19. “중국 '일대일로', 곳곳에서 파열음 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15_0000391500 검색일: 2019년 3월 25일.
20) 연합뉴스. 2018. 11. 08. “中-미얀마, 항만개발 프로젝트 합의…일대일로 다시 탄력받나?”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8111700009 검색일: 2019년 3월 20일.
21) Simon Roughneen. 2011. “War trumps investment in Myanmar, asiatime.” http://www.atimes.com/atimes/Southeast_Asia/MG26Ae01.html 검색일: 2019년 4월 13일.
22) 연합뉴스. 2018. 04. 29. “미얀마군, 이번엔 기독교 반군 겨냥 공세강화…난민 대량발생.” https://www.yna.co.kr/view/AKR20180429022800104 검색일: 2019

군은 샨주 북서부의 가스관을 공격하기도 하였다.[23] 중국은 에너지 외교 과정에서 분쟁 지역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과감함은 미얀마에서도 발현되어 군정 시절부터 자원 교류의 확대를 지속해서 추구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미얀마 내부의 불안정은 송유관과 가스관에 대한 물리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남중국해를 피해 안정적인 수송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장점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이러한 위협의 잔존은 장기적으로 자원 교류의 확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년 4월 15일.

23) 한국일보. 2018. 01. 05. “미얀마 북부 카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원 분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1051923309170 검색일: 2019년 4월 13일.

Ⅴ. 결론

본 연구는 미얀마와 중국의 외교 관계에 대하여 자원교류를 중심으로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미얀마와 중국의 대외 정책 변천 과정에 대해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탐색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 국가 간의 자원 교류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미얀마의 경우, 독립 이후 친사회주의 성향의 대외 관계를 성립하였으며, 특히 비동맹 노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군사적 원조의 필요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관계 수립에도 이따금씩 나서며 실리를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군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비동맹 노선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며 고립주의적 행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더욱 심화되었는데, 중국과의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군정 종식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당초 미얀마의 민주화에 호의적이었던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전망하는 시각이 강하였지만, 로힝야 사태 이후 미얀마에 대한 서방의 압력이 심화되어 군정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또 일대일로의 참여 등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외 정책은 덩샤오핑과 시진핑의 집권을 통해 크게 두 차례의 변화를 겪었으며, 동남아시아와 에너지 외교는 대외 정책의 흐름에 좌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권 수립 이후 전쟁불가피론을 내세웠지만, 덩샤오핑의 집권 이후 개혁개방에 나서며 실용주의적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시진핑 집권과 함께 공세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여 이전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덩샤오핑 이후 실용주의적 대외 정책은 에너지 외교에 있어서 UN이나 서방의 제재, 내전과 같은 국내 정치 문제를 겪는 국가들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틈새시장 공략은 통해 에너지 자원 공급의 다변화 등의 성과를 거둔다. 또한 아세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중국반공산 동맹이란 시각에서 벗어나 협력을 추구하였고, 비록 남중국해와 같은 문제가 잔존함에도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와의 관계에서도 반복되었는데, 특히 군부 집권기 미얀마가 서방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는 동안 중국은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였고, 최근 민정 이양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원 교류 측면에서 가스관을 이용한 PNG 공급으로 에너지 수급 다각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구상에도 참여하여 교류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중국과 미얀마의 자원 교류는 크게 두 가지의 의의가 있다. 먼저 중국의 에너지 자원 수급이다. 1997년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중국은 새로운 공급지 발굴과 안정적인 수송로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미얀마를 통한 PNG 공급은 에너지 자원의 중동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였으며, 서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과 함께 중국의 주요 육상 운송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는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의 불안정한 수송로의 대체 역할도 할 수 있다.

또한 미얀마를 통해 건설된 송유관은 미얀마를 통한 직접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을 넘어 남중국해의 대체 수송로를 제공한다. 또한 일대일로를 통한 차우크퓨항 개발을 비롯한 경제회랑 프로젝트는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세력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얀마와 중국의 자원 교류에는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등에 따라 앞으로도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소비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의 경제 체질 변화 시도와 중국에 대한 반발, 미얀마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은 중국과의 자원 교류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중국에 대한 반발은 양국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 간의 에너지 교류 확대는 물론 현재의 안정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동남아시아와 에너지 외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와의 자원 교류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가 기존 연구와 리포트, 통계 자료에 의존하여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얀마와 중국 간의 관계에 치중하여 아세안과 인도, 미국 등 양 국 간의 교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타 국가들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미얀마와 중국 간의 외교에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관옥 (2018), “미중 무역전쟁 연구 :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1(1): 57-79.

김기정, 천자현 (2009), “중국 자원외교의 다자주의와 양자주의: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자원외교 비교.” 『국제지역연구』 13(1): 107-133.

김옥준 (2009), “마오저뚱 (毛澤東)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정책: 건국 후-60 년대 말.” 『중국학논총』 237-265.

김옥준 (2015),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정치 · 경제적 함의 :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8(1): 289-307.

김정기 (2012), “중국의 에너지 외교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의정논총』 7(2): 351-376.

김정희 (2018), “경제회랑 구축으로 중국과 신밀월 관계 형성 국민 인식 개선하고 정치· 경제적 동반자 될지 관심.” 『CHINDIA Plus』 132: 60-61.

김진호 (2010), “동남아 외교를 통해 본 중국의 대국굴기.” 『중국연구』 50: 337-358.

김홍규 (2015), “시진핑 시기 중국 대외정책 분석.” 17(11): 0-0.

박광득 (2015). “중국의 AIIB 출범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3(3): 121-143.

박기철 (2010), “후진타오 (胡錦濤) 체제하의 중국 석유외교정책의 실제와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51: 215-250.

박병광 (2013),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연구』 139-170.

박병광 (2015),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정책 변화실태 및 시사점.” 17(11): 0-0.

박원곤 (2017),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EAI 논평』 1-4.

박철희, 남기정, 임채성, 이윤석, 조아라, 손석의, 김은경 (2014),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정책연구』 1-108.
변창구. (2004), “중국의 동남아 접근정책과 중-아세안 관계의 전망.” 『21세기정치학회보』 14(3): 199-224.
설규상 (2009), “중국의 대외개발원조와 소프트파워론: 대동남아시아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와 함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8(1): 31-63.
안득기 (2008), “ASEAN 과 중국의 관계변화에 관한 연구.” 『동서연구』 20: 1-34.
안령 (2016), “AIIB를 활용한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전략.” 138.
안세현 (2012),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ODA 정책과 에너지 외교 연계 마스터 전략: 성공 요인과 한계점 분석.” 『동서연구』 24: 1-32.
안슬기 (2019),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 『국제정치연구』 22(1): 61-91.
오윤아, 신민이, 김미림, 정주영 (2017), “아세안·중국 경제관계의 심화와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7(02): 0-0.
오윤아 (2018),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남아의 대응.” 『동서연구』 30: 83-110.
윤성학, 이시영, 이재영 (2010),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개통과 정책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10(1): 0-0.
이선진 (2010),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 『JPI 정책포럼』 2010(7): 1-18.
이성량 (201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의미 및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22(2): 55-74.
이장원 (2015),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정책:'일대일로 (一帶一路)'전략과 유럽.” 『한국동북아논총』 (76): 49-70.
이정남 (2018),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中國夢).” 『아세아연구』 61(4): 165-192.
이주형 (2011), “중국의 대동남아 인식과 정책.” 『인문논총』 27: 359-403.
장베이 (2013), “신시기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장준영 (2009), “미얀마・미국 관계의 반목과 갈등: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
연구』 13(2).
장준영 (2009), “탈냉전 이후 미얀마-인도의 협력과 발전 : 미얀마의 시각.” 15(2): 261-288.
장준영 (2012),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 원인과 전망.” 『JPI정책포럼』 2012(1).
장준영 (2012),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KIIP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준영 (2018), “체제변동국가의 경험과 북한의 변화: 미얀마 모델의 적용 가능성.” 22(2): 305-329.
장준영 (2018), “국가 형성 이념으로서 사회주의의 토착적 적용 : 인도의 네루와 미얀마의 우 누 미교.” 21(1): 115-145.
전재성 (2008),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국방연구』 51(3).
정귀화 (2001), “중국 대외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한일관계.” 『한국민족문화』 (17): 33-67.
정차근 (2018), “중국 외교의 역사적 관성: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18(2): 139-179.
정혜영 (2017), “중국의 대동남아 내륙개도국 (CLMV) 경제외교정책: 해외직접투자 (OFDI)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3): 95-137.
조원일, 박복재 (2017),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1990 년대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53: 133-149.
조홍국 (2012),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위협.” 『Journal of China Studies,』 13: 31-52.
주용식 (2015),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에 대한 전망 분석.” 『국제정치연구』 18(2): 169-190.
주재우 (2003), “21세기 중국의 외교: 에너지외교.” 『대한정치학회보』 11(2): 25-44.

최재덕 (2018),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된 한계점.” 『한국동북아논총』 23(3): 25-46.

한석희 (2008), “중국의 매력공세(魅力攻勢)(Charm Offensive)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지역연구』 12(2): 363-385.

온라인자료

경향신문. 2016. 07. 12. [남중국해 ‘격랑’ 속으로]상설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중 영유권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7122333015#csidxb0f4eb909f572b38fe4cdfa7851a890 검색일: 2019년 3월 10일 .

뉴시스. 2018. 08. 19. “중국 '일대일로', 곳곳에서 파열음 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15_0000391500 검색일: 2019년 3월 25일

아시아투데이. 2017. 10. 19. “견원지간 중국·인도,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에는 한마음 한뜻인 이유는?”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019010006732 검색일: 2019년 3월 20일 .

아시아경제. 2013. 07. 30. “중국-미얀마 가스관 열렸다..정식 가동 시작,” https://www.asiae.co.kr/article/2013073007143597433 검색일: 2019년 3월 16일.

연합뉴스. 2017. 04. 11. “중국, 미얀마에 영향력 확대…대규모 송유관 곧 가동(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1080351083 검색일: 2019년 3월 16일.

연합뉴스. 2018. 04. 29. “미얀마군, 이번엔 기독교 반군 겨냥 공세강화… 난민 대량발생.” https://www.yna.co.kr/view/AKR20180429022800104 검색일: 2019년 4월 15일.

연합뉴스. 2018. 09. 14. “중국, 미얀마 미트소네 수력 발전소 살리기 안간힘.”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4060800076 검색일:

2019년 3월 22일

연합뉴스. 2018. 11. 08. “中-미얀마, 항만개발 프로젝트 합의…일대일로 다시 탄력받나?”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8111700009 검색일: 2019년 3월 20일

연합뉴스. 2019.5.5. “시진핑의 야심작 '일대일로' 프로젝트, 부채 문제 암초,” https://www.yna.co.kr/view/AKR20180808071300009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월간조선. 2016. 02..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 무역 현장 미얀마 군부의 부패로 물든 중국 보석 비취”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1602100045 검색일: 2019년 3월 20일

이투뉴스. 2018. 08. 02. “중국,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10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조선비즈. 2015. 10. 27. “[불붙은 자원전쟁] 자원보고 남중국해 놓고 미·중 충돌 위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7/2015102702421.html (검색일: 2019년 3월 16일)

중국의 창. 2017. 2. 14. “중국의 원유 수입 가파른 상승, 수입의존도 60% 초과.” http://korean.cri.cn/1740/2017/02/14/1s244340.htm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중앙일보. 2013. 11. 30. “미·중 남중국해 충돌 바탕엔 오일루트,” https://news.joins.com/article/13274681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중앙일보. 2017. 05. 07. “미얀마 최대 항구 ‘일대일로’ 거점 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08012008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중앙일보. 2019. 07. 15. “로힝야 난민 사태 그 후…미얀마-중국 '신밀월' 무드,” https://news.joins.com/article/23524943 검색일: 2019년 7월 16일

지앤이타임즈. 2018. 11. 15. “中 천연가스, 어디서 얼마나 수입 하나 살펴보니,”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7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한겨레. 2018. 09. 10. “중 일대일로 사업 삐걱…파키스탄 재검토, 말레이시아는 취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61493.html 검색일: 2019년 3월 16일

한국일보. 2018. 01. 05. “미얀마 북부 카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원 분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1051923309170 검색일: 2019년 4월 13일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11. 21. “中, 천연가스 위주로 에너지 소비정책 전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2620&searchNationCd=101046 검색일: 2019년 3월 20일

Reuters.2011.03.20.“SaudiAramcotosupplycrudetonewPetroChinarefinery.arabfinance.”https://www.arabfinance.com/en/news/details/world-companies/190465검색일:2019년3월16일

Simon Roughneen. 2011. “War trumps investment in Myanmar, asiatime.” http://www.atimes.com/atimes/Southeast_Asia/MG26Ae01.html 검색일: 2019년 4월 13일

Aung Zaw. (2005), “Burma’s Asean Decision Alters Nothing.” *The Irrawaddy.* July 27 European Union. n.d. *The EC-Burma/Myanmar Strategy Paper(2007-2013).* n.d. http://ec.europa.eu/europeaid/where/asia/country-cooperation/myanmar/myanmar_en.htm.

BSPP(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1973), *Foreign Policy of the Revolutionary Government of Burma.* Rangoon: Central Committee Headquarters, BSPP.

BP. (2019). *energy outlook,* BP Publishers: London.

Christie, Kenneth and Denny Roy. (2001),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London: Pluto Press.

Egreteau, Renaud. (2008), “India’s Ambitions in Burma.” *Asian Survey,*

Vol. 48, Iss. 6.

Funston, John. (1999), "Challenges Facing ASEAN in a More Complex Ag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1, No. 2. (August)

Haacke, Jürgen. (2005), "Enhanced Interaction." with Myanmar and the Project of a Security Community: Is ASEAN Refining or Breaking with its Diplomatic and Security Cultur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7, No. 2. (August).

Haacke. (2006), *Myanmar's Foreign Policy: Domestic Influences and Intern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Haacke, Jürgen. (2006), *Myanmar's Foreign Policy: Domestic Influences and Intern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Hilali, A. Z. (2001), "India's Strategic Thinking and its National Security Policy." *Asian Survey,* Vol. 45, Iss. 5.

Hla Min. (1998), *Political Situation of the Myanmar and its Role in the Region.* Yangon: Ministry of Defence.

Holliday, Ian. (2005), "Rethinking the United States's Myanmar Policy." *Asian Survey,* Vol. 45, No. 4. (July/August).

Horn, Robert C. (1975), "Soviet Influence in Sou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Obstacles." *Asian Survey,* Vol. 15, No. 8. (August).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8), *Burma/Myanmar: After the Crackdown*. Yangon/Jakarta/Brussels: 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 Report No. 144.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0), "*China's Myanmar Strategy: Elections, Ethnic Politics and Economics*." Beijing/Jakarta/Brussels: ICG. (September 21).

Johnstone, William G. et. al. (1959), *A Chronology of Burma's International Relations 1945-58*. Rangoon: Rangoon University Press.

Johnstone. (1963), *Burma's Foreign Policy: A Study in Neutralism.* Cambridge, Massachusetts: Havard University Press.

Kanbawza Win. (1986), "An Epilogue on Burma-American Relations: A Burmese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Vol. 10, No. 2. (Fall-Winter).

Katsumata, Hiro. (2004), "Why is ASEAN Diplomacy Changing?" *Asian Survey,* Vol. 44, No. 2. (March/April).

Kyaw Win Hlaing. (2007), "The Politics of Language Policy in Myanmar: Imagining Togetherness, Practising Difference?" Kyaw Yin Hlaing, Lee Hock Guan and Leo Suryadinata. eds. *Language, Nation and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Li, Hak Yin and Zheng Yomgnian. (2009), "Re-interpreting China's Non-intervention Policy towards Myanmar: Leverage, Interest and Interven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No. 61. (September).

Li, Chenyang. (2010), "The Policies of China and India toward Myanmar." Lex Rieffel. ed. *Myanmar/Burma: Inside Challenges, Outside Interests.*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Liang, Chi-shad. (1990), *Burma's Foreign Relations: Neut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onnecticut and London: Praeger.

Lintner, Bertil. (1989), *Outrage: Burma's Struggle for Democracy.* Hong Kong: Review Publishing Company Ltd.

Lixin, Geng. (2006), "Sino-Myanmar Relations: Analysis and Prospects." *The Culture Mandala,* Vol. 7, No. 2. (December).

Malik, J. Mohan. (1995), "China-India Relations in the Post-Soviet Era: The Continuing Rivalry." *The China Quarterly,* No. 142. (June).

Mansingh, Surjit. (1994), "India-China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Vol. 34, Iss. 7. (March).

Maung Aung Myoe. (2006), *Regionalism in Myanmar's Foreign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Working Paper Series No. 73. Singapore: Asia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eptember).

Maung Aung Myoe. (2011), *In the Name of Pauk-Phaw: Myanmar's China Policy Since 1948.* Singapore: ISEAS.

Möller, Kay. (1998), "Cambodia and Burma: The ASEAN Way Ends Here." *Asian Survey,* Vol. 38, No. 12. (December).

Mya Than. (2005), *Myanmar in ASEAN: Regional Co-operation Experience.* Singapore: ISEAS.

Naingan-Nyein-Wu-Pi-Pyahmu-Tihasautphwe(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1991), Taing-Kyo-Pyi-Pyu: aingan-Nyein-Wu-Pi-Pyahmu-Tihasautphwe-i-Hsaunywetchet-Thamingwin-Hmathan 1988-1991(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수행: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의 업적사 기록, 1988-1991년). Yangon: SLORC.

Poon Kim Shee. (2002),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Myanmar Relations: Strategic and Economic Dimensions." *Ritsumeikan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

Seekin. (2005), "Burma and U.S. Sanction." *Asian Survey,* Vol. 45, No. 3. (May/June).

Steinberg, David I. (1999a), "Burma/Myanmar and the Dilemmas of U.S. Foreign Polic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1, No. 2. (August).

Steinberg, David I. (1999b), "Approaching Burma/Myanmar: Foreign Policy Dilemmas." Transcript at Monash University (August 3).

Steinberg, David I. (2007),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e Problem of Burma /Myanmar Polic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9, No. 2. (August).

Steinberg, David I. (2010), (원문: Steinberg, David I. 2010. *Burma/Myanmar: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장준영. 2011.『버마/미얀마: 모두가 알아야할 사실들』. 서울: 높이깊이.

Steinberg and Hongwei Fan. (2012), *Modern China-Myanmar Relations: Dilemmas of Mutual Dependence.* Copenhagen: Nias Press.

Thin Thin Aung and Soe Myint. (2001), “India-Burma Relations.” IDEA(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Challenges to Democratization in Burma: Perspectives on Multilateral and Bilateral Responses.* Stockholm: IDEA.

U Nu. (1951), *From Peace to Stability.* Rangoon: Ministry of Information.

Zaw Oo. (2006), “Exit, Voice and Loyalty in Burma: The Role of Overseas.